

# 전주시, 드론 안전검증 시범 첫 비행

### 완산체련공원 시범공역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비가시권 비행 등 시연

전주시가 항공공학과 IT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신성장산업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전주시는 3일 중인동 완산체련공원 내 시범공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첫 드론 비행에 나섰다.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국토조사, 고고도 비행, 비가시권 비행, 자동비행시스템 시험, 지형·지리적 영향 평가시험 등의 시연을 펼쳤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전국 5개(전주, 영월, 대구, 고흥, 부산) 공역에서 15개 시범사업자(22개 참여기관)가 8개 분야(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농업지원)에 대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드론 활용 안전성을 검증해 오는 202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첫 비행이 국내 드론산업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관련규제도 단계별로 발빠르게 정비하여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산체련공원 내 시범공역은 이륙장 조성과 함께 축구장을 착륙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회의실, 드론 보관소, 전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풍향풍속계, 에어캡프레서, TV(관측용), 책상·의자 등 사무용품이 설치돼 내년 말까지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출한 비행계획에 따라 드론 시범비행을 실시하게 된다.



한국에 온 중국 판다 3일 대한항공 화물기편으로 중국 청두를 출발한 판다 암·수 한쌍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에서 규제하는 야간, 장거리, 고고도 비행 등의 비행규제를 전용공역에 한해 해제하고 물류·국토조사·지적측량 등의 유망사업 분야의 시험운영은 물론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호정솔루션, 대영측기, 성진에어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공역에서 국토조사와 시설물 안전진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자와 참여기업에게 홍보하여

전주시 시범공역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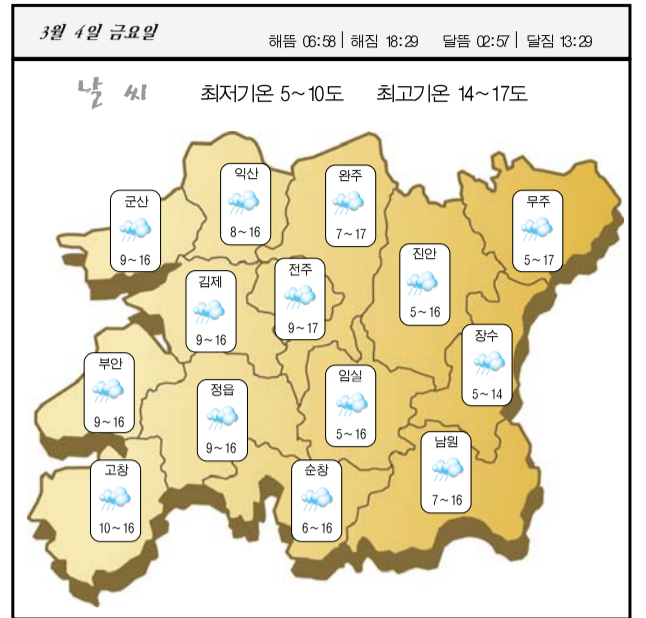
또한 시는 드론이 기계경량화, 배터리, 자율비행 등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량화 소재인 탄소섬유를 융합한 기술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융합기술원, 항공관련 종합대학 등이 ICT기술 기반과 융합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농촌진흥청, 신드론(주)헬셀, 성진에어

로, JB드론코리아, 이노벤투스(동호회), M파워 등 국내 드론업체와 선진기술 융합이 가능하며, 농생명 산업기지를 비롯한 테스트베드 확보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비행 시범공역 조성을 통해 향후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기초기술 및 기업 인프라 구축으로 드론산업 육성 및 전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드론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영재 기자



## 교육부, 14개 시·도교육감 검찰 고발

### 시국선언 교사미징계 사유로

교육부가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담은 제63조 등을 위반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다.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원 인사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며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은 "9일까지 징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주 기자

## 동헌학당 '간찰' 수강생 모집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선착순으로... 30일 개강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헌학당 세 번째 프로그램인 '간찰(簡札)', 옛 선비의 마음을 엿보다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동헌학당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인문 특강프로그램으로 선조들의 삶 이력과 문헌 그리고 사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배움 공동체 운영을 통해 전통과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헌학당 세번째 프로그램인 '간찰'은 선조들의 한문 편지로 선비 부부의 삶과 소통, 선비의 위정, 시대상 등을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준비했다.

이달 30일 개강하는 동헌학당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전주동헌에서 간찰에 대해 수업이 진행되며 5월 11일까지 총 6강의 과정을 운영한다.

구성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장 "이번 기회를 통해 옛 선비들이 나눴던 소통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통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신청은 연수원 홈페이지(dongheon.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063-288-9242~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 새만금청, 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3일 2016년 제1차 새만금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는 산단의 투자유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새만금청 주도 하에 전북도·군청·시·농어촌공사의 국장급 투자유치 담당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번 회의는 올 첫 회의로 참석 기관 간 투자유치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활동성과 및 상생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큰 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새만금투자유치 방향을 토대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에 기업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 초기 단계부터 관심기업을 철저히 검증해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전북도 등 관계 기관은 개방·소통·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추진 예정인 투자유치설명회 등 주요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다각도로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정영수 기자

## 대법, 도교육청 학교조례 집행정지

### 도의회·도교육청 강력 반발

법원이 올해 1월 전북교육청이 공포한 학교지치 조례에 대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지치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학교지치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전북도의회는 대법원의 학교지치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전북도의회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상위법령 위반은 교육자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학교장들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교지치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교지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국립세종로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유산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